

행정학

본 문제와 해설의 저작권은 네오고시뱅크(Neo Gosibank)에 있습니다. 무단복제시 저작권법에 의거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충 모의고사 문제들입니다. 점수에 신경쓰지 마시고, 최신 기출문제와 최신 이슈 중심으로 문제를 만들었으니, 불의타 방지용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문제를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건승하십시오.

1. 시장실패의 이유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정부의 공공지출에 대한 순편익 극대화 보장의 어려움
- ㄴ. 공공서비스 성과평가의 객관적 기준설정의 어려움
- ㄷ. 국방 및 치안서비스 활동과 같은 공공재의 독점적 성격
- ㄹ. 환경오염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효과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ㄷ, ㄹ

2. 다음 중 호프스테드(Hofstede)의 문화차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권력거리, 불확실성 회피, 장기-단기 성향, 보편주의-특수주의, 남성성-여성성, 성취-귀속을 포함하고 있다.
- ② 장기성향이 강한 사회는 전통보다 현재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실적응적이며 변화지향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③ 권력거리(power distance)란 조직이나 단체에서 권력이 작은 구성원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배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 ④ 불확실성 회피 정도가 큰 문화에서는 공식적인 규칙을 되도록 적게 만들려고 한다.

3. 정책결정요인론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체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② 정치체제의 매개·경로적 역할을 고려하지 않는다.
- ③ 정치체제가 지니는 정량적 변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④ 정치체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

4. 리플리(Ripley)와 프랭클린(Franklin)의 경쟁적 규제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가 소유한 희소한 자원에 대해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지정된 소수에게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도록 규제한다.
- ② 선정된 승리자에게 공급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이들에게 규제적인 조치를 하여 공익을 도모할 수 있다.
- ③ 경쟁적 규제정책의 예로는 주파수 할당, 항공노선 허가 등이 있다.
- ④ 정책집행 단계에서 규제받는 자들은 규제기관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저항하기도 한다.

5. 시민단체 해석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사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사회란 NGO 등의 자원조직이 많이 생겨서 효과적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 ②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를 위한 책임있는 개인의 자원봉사 정신을 강조한다.
- ③ 다원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보수주의를 절충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 ④ 사회자본론도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에 대해 의미있는 해석을 강화하며, 사회자본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생산되는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6. 정책과정에 관료가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료의 우월적 위치의 근원으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치자원의 활용
- ② 정보의 통제
- ③ 사회적 신뢰
- ④ 전략적 지위

7.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 ① 경제적 규제
- ② 바우처
- ③ 조세지출
- ④ 직접대출

8.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적 평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량적 기법을 응용하여 수치화된 지표를 통해 정책의 결과를 측정한다.
- ② 정량평가라고도 하며 실험적 방법과 비실험적 방법 등이 해당한다.
- ③ 정책대안과 정책산출 및 영향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 ④ 대부분 데이터 수집을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등의 방법에 의존한다.

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 ② 국무총리 소속하에 심의·의결기구로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0. SWOT분석을 기초로 한 전략에서 방향전환전략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SO 전략 ② WO 전략
- ③ ST 전략 ④ WT 전략

11. 전략기획(strategic plann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확실한 미래에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과정이다.
- ② 상대적으로 정치 및 경제 등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유용성이 높다.
- ③ 정책결정에 비해 외부환경에 개방되지 않고 전문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편이다.
- ④ 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조직진단을 통해 실현 가능한 설계에 초점을 맞춘다.

12. 조직구조의 분권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규칙과 절차의 합리성·효율성에 대해 신뢰하고 있다.
- ② 기술과 환경이 격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③ 고객에게 신속하고 대응적인 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④ 조직구성원들의 참여 확대와 창의성 발현이 요구되고 있다.

13. 베버(Max Weber)의 관료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성을 조직에 적용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관료제를 간주한다.
- ② 실적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채택하는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 ③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 절차나 방법을 문서화된 법규형태로 가진다.
- ④ 관료제의 구성원들은 조직 전반의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14.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더퍼(Alderfer)의 욕구내용 중 관계욕구는 머슬로(Maslow)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에 해당한다.
- ② 애덤스(Adams)는 투입한 노력 대비 얻은 보상에 대해서 준거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끼는 공평함의 정도가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 ③ 과거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예 : 성취감, 자아실현 등)와 외재적 동기(예 : 보수, 승진 등)를 상충관계(Trade Off)로 이해하였다.
- ④ 최근의 연구에서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를 연속선상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15. 공직동기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동기는 민간부문 종사자와는 차별화되는 공공부문 종사자의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 ② 공직동기이론에서는 공공부문의 종사자들을 봉사의식이 투철하고 공공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공공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개인으로 가정한다.
- ③ 페리와 와이즈(Perry & Wise)에 따르면 공직동기는 합리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으로 구성된다.
- ④ 1980년대 이후 급격히 확산된 신공공관리론의 외재적 보상에 의한 동기부여를 재차 강조한다.

16. 목표관리제(MBO)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부하와 상사의 참여를 통해 목표를 설정한다.
- ㄴ. 중·장기목표를 단기목표보다 강조한다.
- ㄷ. 조직 내·외의 상황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조직에서 성공확률이 높다.
- ㄹ. 개별 구성원의 직무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목표의 정성적, 주관적 성격이 강조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ㄹ ④ ㄷ, ㄹ

17. 성과주의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조직의 경우 예산주기 등으로 인해 성과 평가 과정에서 즉각적인 환류가 용이하지 않다.
- ② 개인성과평가 등 추가적 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③ 성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조직 공정성을 제고한다.
- ④ 경쟁을 통해 개인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에 기여한다.

18.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3. 4. 4. 시행 기준)?

- 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소속 장관은 과장급직위나 소속 기관의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4급 및 5급 경력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급직위를 공모 직위로 지정하되,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해야 한다.
- ③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뿐만 아니라 공직 외부에서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 ④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일반 승진요건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지 못한 공무원이라도 바로 상위 직급의 공모 직위에 지원 가능하도록 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이 역량을 펼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19.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정당화 근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엽관주의의 폐해를 극복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하는 신분이다.
- ③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강화하여 공직의 계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 ④ 공명선거를 통해 민주적 기본질서를 제고할 수 있다.

20. 국채 우선 상환 이후 세계잉여금의 사용 순서를 다음에서 옳게 연결한 것은?

- ㄱ.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 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
- ㄷ.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
- ㄹ.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
- ㅁ. 기타 채무(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국가배상금 등) 상환

- ① ㄱ→ㄴ→ㄹ→ㅁ→ㄷ
- ② ㄱ→ㄴ→ㅁ→ㄷ→ㄹ
- ③ ㄱ→ㄴ→ㅁ→ㄹ→ㄷ
- ④ ㄴ→ㄱ→ㄹ→ㅁ→ㄷ

21. 우리나라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분한다.
- ② 국회의 예산에 예비금을 두며 국회의장이 이를 관리한다.
- ③ 세입예산은 관·항·목으로 구분한다.
- ④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이 이루어진다.

22. 다음 중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지출이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한다.
- ② 재량지출이란 지출의무와 규모가 국회가 심의·확정하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결정되는 지출을 말한다.
- ③ 의무지출에는 공적연금, 공공부조, 사회보험, WHO 의무분담금 납부 등이 있다.
- ④ 재량지출에는 경직성 경비와 국방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기재정계획은 정부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수립하는 재정운용계획이다.
- ②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 계획이다.
- ③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회가 심의하여 확정한다.
- ④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를 반영하며, 단연도 예산편성의 기본틀이 된다.

24.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직속 기획처 예산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②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수입·지출의 총괄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 ③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하여 세제, 예산, 국고 기능을 일원화하였다.

- ④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5. 다음 중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1994년 총사업비관리제도를 시행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 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이상인 신규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은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2006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예산낭비 방지방안을 제안한 공무원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 성과금을 받을 수 없다.
- ④ 2007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System)이 구축되어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정부의 재정활동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있다.

26.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②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작성·취득해 관리하는 정보나 데이터로 한다.
- ③ 공공데이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둔다.
- ④ 공공데이터 제공 제외 대상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대상으로 제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나 데이터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27. 다음 중 새로운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으로 제시된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BTO	BTL
㉠	실제운영의 주체	민간	정부
㉡	운영 시 소유권	정부	민간
㉢	투자비 회수방법	사용료	임대료
㉣	소유권 이전시기	준공	준공

- ① ㉠ ② ㉡
- ③ ㉢ ④ ㉣

28. 다음 중 신중양집권화와 관련된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나타날 수 있다.
- ② 중앙-지방간의 관계는 기능적·협력적 관계이다.
- ③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상대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④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신중양집권화를 촉진하였다.

29. 다음 중 아래의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들어갈 내용이 모두 맞는 것은?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도는 (), 제19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 이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의 경우에는 ()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① 19세 - 300명 - 200명 - 150명 - 19세 - 대통령 - 주무부장관
- ② 18세 - 200명 - 150명 - 100명 - 18세 -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
- ③ 19세 - 300명 - 250명 - 200명 - 19세 - 대통령 - 주무부장관
- ④ 18세 - 300명 - 200명 - 150명 - 18세 -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

30.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사무배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도가 처리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접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은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 공동된 사무이다.
- ④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는 시·도의 사무이다.

31.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시·군·구청장이 위촉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 ②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주민대표성이 강하다.
-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의 자문기구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의 협의·실행기구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더 대등한 협력적 관계이다.

32. 쇠퇴·낙후된 도시에 대한 기존의 재정비 방식은 하향식 의사결정, 경제적 효과(개발이익) 극대화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다음 중 이에 대한 반성으로 정부행정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한다.
- ② 하향식 의사결정을 사용한다.
- ③ 지역공동체를 복원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④ 지속적으로 기존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

33. 정부간 관계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라이트(D. S. Wright)는 미국의 연방, 주, 지방정부 간 관계에 주목하여 분리형, 중첩형, 포함형으로 구분했다.
- ② 그린피스(J. A. Griffith)는 영국의 중앙·지방 관계는 중세 귀족사회에서 지주와 그 지주의 명을 받아 토지와 소작권을 관리하는 마름(steward)의 관계에 가깝다고 하여 지주-마름 모형을 제시했다.
- ③ 로데스(R. A. W Rhodes)는 집권화된 영국의 수직적인 중앙·지방 관계 하에서도 상호의존 현상이 나타남을 권력의존모형으로 설명했다.
- ④ 무라마쓰(村松岐夫)는 일본의 중앙·지방 관계의 변화에 주목하여 수직적 행정통제모형과 수평적 정치경쟁모형을 제시했다.

34. 현행 지방세의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지방세 일부 세목의 세율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 레저세, 지방소비세는 탄력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조례로 담배소비세, 주행분 자동차세에 대해 표준 세율의 50%를 가감하는 방식과 같이 일정 비율을 가감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된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35.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헌의회가 성립하면서 1949년 전국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1991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 ③ 1995년부터 주민직선제에 의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 ④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는 실시되었으나, 시·읍·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36.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유형과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으로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특별시 명칭을 부여받고 자치구를 둔다.
- ③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사무 처리와 조례 제정을 할 수 없다.
- ④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37. 「주민조례발안법」 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조례청구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18세 이상의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청구권자가 전자적 방식을 통하여 주민조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청구권자가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일정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38. 우리나라의 주민소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민소송에서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소의 취하, 소송의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를 할 수 있다.
- ② 주민소송의 피고는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이다.
- ③ 주민감사를 청구한 개인은 누구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소송의 계속 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주민의 자격을 잃더라도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39. 특별시·광역시의 보통세와 도의 보통세에 공통적으로 속하는 세목만을 모두 고르면?

- | | |
|----------|----------|
| ㄱ. 지방소득세 | ㄴ. 지방소비세 |
| ㄷ. 주민세 | ㄹ. 레저세 |
| ㅁ. 재산세 | ㅂ. 취득세 |

-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ㅁ
 ③ ㄴ, ㄹ, ㅂ ④ ㄷ, ㅁ, ㅂ

40. 세외수입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을 특정소비자가 사용할 때 그 반대급부로 개별적인 보상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이다.
- ㉡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별히 이익을 받을 때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해 그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하는 공과금이다.
-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정 서비스에 의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수입이다.

- | | | |
|-------|-----|--------|
| ㉠ | ㉡ | ㉢ |
| ① 사용료 | 분담금 | 수수료 |
| ② 수수료 | 부담금 | 과년도 수입 |
| ③ 사용료 | 부담금 | 과년도 수입 |
| ④ 수수료 | 분담금 | 사용료 |